

의안번호	제 872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0월 13일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872
----------	-----

제안연월일 : 2021년 10월 13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 2019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시군구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진료권을 지정하였는데, 충북도는 3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되었고 남부3군이 청주권으로 포함되었음.
- 그러나, 청주권 책임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의원이 청주에 집중되어 남부 3군의 경우 접근용이성 기준인 약 60분 이내 이동시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취약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도내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할 것을 촉구함.

2. 붙임 : 건의안

- 3. 보낼 곳 :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5개년('15~'19)동안 치료가능 사망률¹⁾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고,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²⁾와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³⁾도 5개년 평균 '매우 열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볼 수 있듯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여 있고 특히, 남부 3군인 옥천, 보은, 영동은 도내 11개 시·군 중 높은 치료가능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환경의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시군구를 권역 경계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진료권을 지정하였고, 충북은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등 3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의 중진료권 개수를 보면, 충북보다 인구수가 적은 강원이 6개권, 인구수와 면적이 비슷한 전북이 5개권으로 지정된 것에 비해

- 1)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을 의미하며 10만명 당 발생하는 조기사망자 수로 표현됨.
- 2)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중증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예상했던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한 수가 더 많다는 뜻이며, 복지부는 사망비에 따라 각 지역을 '우수(0.9 이하)', '보통(0.9 초과 1.0 이하)', '열악(1.0 초과 1.1 이하)', '매우 열악(1.1 초과)'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3)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란 입원 후 30일 이내에 급성 뇌졸중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

충북은 단 3개권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권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등 6개 시·군의 111만 7천 명이 한데 묶여있어, 충주권(3개 시·군) 35만 2천 명, 제천권(2개 시·군) 16만 2천 명과 비교 시 증진료권 구분의 인구규모 기준이 무색할 만큼 청주권에 인구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권 책임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의원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상 원거리인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의 경우, 청주시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시간이 자차 기준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교통 혼잡 시 그 이상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이는 증진료권 구분 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접근용이성 기준인 약 60분 이내의 이동시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남부3군은, 2023년 착공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추진 시, 생활권 중심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공동대응 차원에서 대전시와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창궐한다면 대전시는 14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대전시와의 협약은 진료권과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한 단기적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이는 청주권에 남부3군을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의 증진료권 선정이 잘못 됐음을 반증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충북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3군을 증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10.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